

D·N·A 경제구조 고도화... 올 디지털 뉴딜에 7.6조 투입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2025년까지 총 58.2조원 투입
90만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AI 학습용데이터 150종 구축
공공데이터 4.4만개 전면개방
교육디지털화·스마트의료 등
비대면 기반 다지기에 6천억원

<2021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구분	투자(국비) (조원)			제도정비규제개혁
	20주	21년	~25년	
① D.N.A 경제구조 고도화	1.9 (1.3)	9.9 (5.2)	38.5 (31.9)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정 등
② 비대면 기반 확충	1.1 (0.7)	0.7 (0.6)	3.8 (2.9)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공공 부문 표준 원격 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③ 디지털화	0.5 (0.4)	2.1 (1.8)	15.8 (10.0)	·자율주행 토대를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 등
계	3.5 (2.4)	12.7 (7.6)	58.2 (44.8)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올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총 7조60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구조 고도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3차추경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이하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D.N.A 경제구조 고도화...5.2조원 투입

우선 국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D.N.A 경제구조 고도화에 나선다. 데이터 구축·개발·활용에 나서 데이터 기반 전산업 혁신 촉진을 위해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법제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개소와 운영 등에 나서면서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한다. 데이터 바우처나 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고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AI와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5G 장비 등을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5G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또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AI 국민서비스' 서비스 등 정부 서비스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6G 기술과 AI 반도체 설계 등 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심 기술을 1223억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1조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신사업 개발 지원을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한다.

◆ 교육·의료·비즈니스, 비대면 기반 다진다

비대면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교육 디지털화, 스마트의료, 비대면 비즈니스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 디지털화를 위해 초·중등 일반 교실 등 27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

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를 구축한다. 또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과 만성질환자 5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한다.

원격근무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철도·도로·공항 등 SOC도 디지털화
이와 함께 도로, 철도, 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산업 기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C-ITS 구축을 추진한다. 일반국도 1만1670km에도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실시간으로 탐·하천을 관리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스마트 재난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을 보장할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이재용 부회장이 글로벌기술센터(GTC)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JY, 6G 기술점검 등 현장경영 박차

삼성리서치서 세트부문 사장단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 경영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6일 서울 삼성리서치에서 세트부문 사장단 회의를 주재했다. 차세대 6G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AI) 연구개발 현황 등 미래 전략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차세대 통신 기술 연구 경과 ▲서비스용 기술 확보 ▲AI 기술 제품 적용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자리에는 김현석 CE부문장과 고동진 IM부문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세바스찬 승 삼성리서치 연구소장 및 각 사업부 담당 사장들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4일 새해 첫 행보로 평택 2공장을 찾아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확인하고, 곧바로 삼성리서치에서 선행기술 개발 회의를 주재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최근 "신사업을 발굴해 사업을 확장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사명감을 갖고 회사와 산업 생태계를 키워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2018년 AI와 5G, 전장용 반도체 등을 4차 산업혁명 구현에 필수적인 '미래육성사업'으로 선정하고 신사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삼성리서치는 미래 유망 분야의 선행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산하에 ▲글로벌 AI센터 ▲차세대 통신 연구센터 ▲소프트웨어혁신센터 등을 두고 있다. AI를 접목한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기능 혁신과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6G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 중이다. 세바스찬 승 연구소장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뉴 삼성'을 위해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탁발한 첫 AI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신규확진 840명... 이틀째 1000명대 아래

방역당국 "감소추세 느리고 완만
17일까지 확실한 반전 추이 만들어야"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남아 변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 아래로 내려왔다. 정부는 이번 3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완만한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아직 안심은 이르다는 분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일보다 125명 늘어난 840명을 기록했다. 전일 715명인데 이어 이틀 연속 1000명대 아래로 내

려온 상태다. 이 중 지역발생은 809명으로, 경기도 269명, 서울 263명 등 여전한 수도권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와 특별방역 조치가 이어지는 오는 17일 까지 확실한 반전 추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가 800명대로 낮아지면서 현재 유행이 정점에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 달 이상 남아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염자 1명이 추

가로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계속 감소해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특성상 증가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감소 추세는 상당히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3차 유행은 일상 생활 감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감소 추세는 느리고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전히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이어지고 있어 위험 요인은 남은 상태다. 최근 한 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일 평균 864명 수준으로, 아직 거리두기 3단계 범위를 벗어난 건 못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명퇴금 2배 늘려도 신입 2명 채용 가능

>> 1면 '국책은행 명퇴제도...'서 계속

월 500만원을 받는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이용할 경우 5년간 받는 금액은 1억 5400만원이다. 명퇴금보다 많은 금액에 기타 부수적인 복지까지 더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

◆국책은행 10명 중 1명은 임피

문제는 이처럼 임금피크제 비율이 높아질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통상 임금피크제 직원은 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이에 맞춰 협업과 무관한 업무

를 맡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로 빈 자리는 새로운 직원으로 채울 수 없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고임금이기 때문에 신입직원을 채용하기 어렵고, 매년 정부로부터 직원수를 제한받아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다. 결국 같은 업무량을 두고 나머지 직원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3분기 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직원은 3156명 중 316명으로 10%를 넘었다. 수출입은행은 1079명 중 47명으로 4.3%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는 비율은 산업은행 17.3%, 수출입은행 6.5%, 기업은행 11.1%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명예퇴직금을 2배 이상 늘리더라도 나가게 되면 산술적으로 임금부담이 적은 신입 직원을 2명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동조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국책은행의 명예퇴직금을 올려주면, 다른 공공기관 역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경우 자칫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만약 다른 공공기관의 명퇴금도 일제히 올려주면 세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나유리 기자 yu115@